‘왼쪽 진출로’ 광주 지산IC ‘반쪽 감사’로 또 논란

설계 변경 과정서 전문가 의견 묵살 담당 공무원 징계에만 그쳐
외압설 등 배제…수사 의뢰·피해액 회수 등 적극 감사로 바꿔야
개통 못한 ‘77억 애물단지’ 49억 혈세 들여 오른쪽 진출로 추진

애초 오른쪽이었던 진출로를 갑자기 생소한 왼쪽으로 바꾸는 바람에 혈세 수십억원을 낭비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광주 지산 나들목(IC) 사업과 관련, 광주시 자체 감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징계를 받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시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해당 지역 정치인 개입·외압설 등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제외돼 ‘반쪽짜리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지산IC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좌측 진출로 설계 변경 부적정 등 6가지 사안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담당자 6명에게 훈계, 2명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일부 자문 위원들이 우측 진출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광주시 도로과 담당자들이 자문 의견 반영이나 추가 자문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구도심 연결 편의와 지산유원지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지산IC 진출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순환도로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빠져나갈 때 도로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이용하도록 진출로 설계를 변경했다.

도로 오른편 주거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최초 설계에 도시가스, 전기 지중관로, 상하수도 등 지장물이 누락돼 이설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였다.

당시 광주시가 이 같은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한 결과 자문 위원 5명 중 3명은 좌측 진출을 전제로 한 하부 교차로 보완 의견을, 2명은 좌측 진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위원들은 좌회전 구간도 아닌데 고속으로 운행하는 왼쪽 차선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으나, 광주시는 보완 방안만 제시한 사업자의 계획서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지적했다.

결국 총공사비 77억원을 투입한 폭 6.5m, 길이 670m 도로는 2021년 11월 완공됐지만 2년 가까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4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진출로를 다시 오른쪽으로 바꾸기로 하고 재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선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번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처럼 바꾸지 않는 공직사회 특성상 담당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단순 주민 민원을 들어 일반적인 오른쪽 진출로를 생뚱맞은 왼쪽 진출로로 바꿨겠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 차질로 행·재정적인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 행위 중심의 감사방식을 벗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감사 행위가 이뤄져야만 추후 유사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물론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결정한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하는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면서 “민선 시대 병폐인 외부압력 등은 외면하고, 공무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린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 주도형 충장축제 80만 방문 ‘역대 최대’

지난해보다 20만명 늘어…임택 동구청장 “세대·국경 초월 더 알찬 축제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광주시 동구는 올해 충장축제에 주최측 추산 80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0만여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0만여명이 늘었다.

‘충·장·발·光(광)’을 주제로 치러진 이번 충장축제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축제’에 방점을 두고 치러졌다.

도심 한복판에서 폭죽 수천발을 터뜨리는 ‘마스 끌레타’를 비롯해 메인 퍼레이드에서 불꽃을 이용한 묘기를 선보인 ‘파이어아트 쇼’, 5m 높이의 조형물을 불태우는 ‘점화식’ 등 ‘불’을 중심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았다.

‘추억의 롤러장’, ‘광주 버스킹월드컵’, ‘추억의 고고나이트’ 등 행사가 충장·금남로 곳곳에서 열려 인파가 몰렸으며, 분필로 금남로 거리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추억정원에 자기 추억을 적은 양초를 놓아두는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충장축제는 남녀노소, 세대 초월, 국경 초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치러졌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충장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氣up·ALL 바른 PM 라이더·그림책 페어런팅…

지자체들 국적불명 ‘신조어 사랑’ 눈살

광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은어, 비속어, 국적불명의 명칭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9일 한글날 577돌을 계기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분석한 결과 외래어·신조어·합성어·줄임말 등을 남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광주시 서구는 ‘서구형 감(減)탄 에코하우스 조성’, ‘기업(氣up) 매니저 운영’, ‘양동시장 K-관광마켓 추진’ 등 사업 명칭에 한자어와 외래어를 집어넣었다. 주 이용객이 어린이인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조차 ‘그림책 페어런팅’, ‘톡톡(Talk Talk) 책으로 떠나는 여행’ 등 프로그램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줄임말을 지어내 사업명으로 사용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광산구는 광산교육 ‘오로라 페스티벌’을 열며 ‘광산 교육 배움의 가치인 다섯가지 길을 따라 펼쳐지는 행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동 노동자 휴게쉼터를 개설하며 ‘달고나’라고 이름짓고 ‘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의 줄임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참여한 캠페인 또한 국토부 ‘ALL 바른 PM 라이더 캠페인’, 환경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등 외래어를 짜깁기해 이름 붙인 경우가 다수였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비슷한 상황이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과 광주 지역 학교들이 최근 3개월간 작성한 공문과 보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대입 전문 디렉터’, ‘빛고을 에듀몰’, ‘AI 팩토리’. ‘光탈페’ 등 외래어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5년 자격 정지’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황 회장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지리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징계 사유로는 황 회장이 부상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이 꼽혔다.

황 회장은 정관에 따라 임원으로 분류돼 징계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사회는 징계 최종 결정 여부를 가리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장 직무를 문종연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에게 맡길 방침이다.

회장은 “임시이사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계안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황 회장이 지난달 7일 5·18부상자회 상벌위원 등 7명을 직위 해제시켰으므로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상벌심사위를 열었다는 것이다.

5·18부상자회 간부들은 황 회장의 직위 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가처분결과는 1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회장은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법원에 임시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